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발행 2023.6.27.

퍼낸곳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글 쓰는 순서

목차	4
10문 10답을 발간하며	6
01 노동자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고, 보수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지지할 정당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10
02 당장 진보정당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선거연합정당을 세워 총선에 대응하고, 나중에 각자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요?	14
03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은 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나요?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세운 민주노동당은 왜 없어졌나요? 민주노총이 최근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8
04 과거 진보정당의 역사를 볼 때,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나요?	32
05 선거연합정당 문제를 말할 때 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따져야 하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36

-
- 06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더라도, '전쟁 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민주노총의 입장 정도면 합의할 수 있지 않나요? 41
 - 07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처럼회'에 가입했던 사실도 있던데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혹시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건가요? 46
 - 08 노동운동의 어떤 세력은 '당 중심 노동운동'을 외치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51
 - 09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해서라도 진보정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보정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57
 - 10 진보정당이 발전하려면 민주노총이 뭔가 변화를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64

10문 10답을 발간하며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두고 대의원들이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현장의 요구를 법안으로 통과시킬 국회의원도 절실하다” “민주노총이 나서 진보정당을 합치면 국회 20석은 당선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계를 노동자 직접 정치로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대의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은 초라합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발표의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응답한 간부들의 42.6%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도, 선거 때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 대의원들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선거연합정당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이 그럴 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당위를 앞세우기 전에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 역시 많은 수의 대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며 “역사 성찰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는지 찬찬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선거연합정당안을 정확히 비판하려면 조합원과 기층 간부들에게 일종의 ‘오답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아는 문제를 푸는 건 쉽지만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스스로 무엇을 모르고 있고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똑같은 오답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4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들을 공론화해 기층과 현장에서 이를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던 쟁점들을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진보정당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일견 바람직해 보이는 주장이 왜 실제로 분열을 부르는 길인지 설명하고, 통일된 선거방침을 위해 이번에 고안된 가설정당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냐는 반문에 대해 답합니다.

둘째로 진보정당이 분열하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소멸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수파의 패권주의가 왜 특히 문제가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셋째로는 선거연합정당 문제에서 북한 문제, 특히 북핵에 대한 견해가 왜 중요한지, 이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다음으로는 오랜 시간 누구도 공공연하게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금에 이르러 노조운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주파의 ‘당중심 노동운동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몰입했던 행적을 보았을 때, 가설정당이 결국 야권연대를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보정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혁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 책자로 모든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책자가 제기하는 쟁점들이 조합원, 간부들의 진지한 생각과 언어로 재해석되어 선거방침 논의가 더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건강한 토론을 통해 조직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민주노총이 역사의 바른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갑시다.

2023년 6월 27일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노동자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하고, 보수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선 노동자가 지지할 정당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지금의 상황은 20여 년에 걸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위기에 빠진 결과입니다. 왜 위기에 봉착했는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당위만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합니다.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대변하는 선거연합정당을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분열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지 못한 채 기존 진보정당들의 표를 한데 모아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긍정적 전망도, 감동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10년 안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라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을 보며 서로 무엇이 그리 다르기에 따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위만을 내세워 급하게 추진하는 진보정치의 통합은 반드시 역효과를 부를 것입니다.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지지부진한 이유

를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과관계를 뒤집은 설명입니다. 진보정당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추진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20여 년에 걸쳐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복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아픈 실패의 흔적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기성 정당이 대변할 수 없는 사회변혁이란 지향을 노동자 스스로 세력화하여 실현해보겠다는 민주노총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보정당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은 앞으로 이어질 문답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결별한 커플에 비유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헤어졌는데, 몇 년 뒤에 나타나서는 해결된 것 하나 없이 억지로 붙잡는다고 관계가 유지될 리 없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성격 차이(북핵을 둘러싼 갈등), 거짓말(당내 선거부정), 심지어 물리적 폭력(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세력화는 연인이나 부부 간의 문제를 뛰어 넘는 거대한 기획입니다.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위기에 빠졌는지 성찰 없이 ‘다시 한 번 모여보자’는 식으로는 누구도 혹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를 반복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을 말하지만 실제로 분열을 부르는 길

진보정치 세력이 다시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는 일은 그 필요성,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실제로 성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진보정당들은 각기 다른 조건에 놓여 있고, 전혀 다른 전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장 진보당 외에 어떤 진보정당도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선거연합 정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선거연합정당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민주노총 내 다양한 세력들을 포괄할 수 없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렇게 ‘말뿐인 선거연합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자고 민주노총 내 특정 세력이 무리해서 밀어붙인다면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단결을 해칠 게 분명합니다. 민주노총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역으로 민주노총의 분열을 재촉하는 셈입니다.

진보정치 운동이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좌절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에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진 게 아니냐고요? 실제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패배했고, 여러 정치세력의 상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겸허하게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노총 대의원의 많은 수를 차지한 정파가 ‘선거연합정당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정치방침·총선방침을 밀어붙이는 지금 상황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진 패권주의 논란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이 진보정

치 세력들의 상호 불신을 또 한 번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동 없는 선거연합, 운동의 방향이 될 수 없다

무너진 것은 운동 내 세력들의 상호 신뢰만이 아닙니다. 진보정치 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정당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진보정치가 기성 정당보다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나 핵 문제를 두고 침묵하거나 말을 돌려 북한을 옹호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들이 진보세력이 맞느냐고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반복되는 야권연대는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보수 정권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손을 잡아 왔습니다.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당당히 서겠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꿈이 흐려지고, 민주당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2중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평가하며 답해야 할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진보정당 의석 수 늘려보자는 선거공학적인 목표밖에 없는 채로 추진하는 선거연합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민주노총 바깥에 있는 많은 대중에

게 어떠한 긍정적 전망도, 감동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이전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선거연합은 사회를 바꾸는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지 못합니다.

02

당장 진보정당을 통합하기 어렵다면 선거연합정당을 세워 총선에 대응하고, 나중에 각자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요?

선거연합정당은 골치 아프게 강령을 토론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에서 힘을 모아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므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산해도 의석수를 늘리기 어렵고,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도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친민주당 행보를 보이는 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제어하지 못해 강성희 의원이 선거연합정당의 향후 행보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했던 총선방침안은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정당을 통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용 가설정당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정당 각자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을 조율해 합의하기가 쉽지 않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아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연합정당은 골치

아프게 강령을 토론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에서 힘을 모아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므로 매력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거연합정당은 득표율에서도 이점이 없고, 지향하는 비전도 불분명해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생소한 개념인 선거연합정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정당들이 통합하려면 기존의 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방법으로 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인 선거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기존의 정당을 유지하면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연동형 비례 의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례의석 득표만을 위해 정당명부 비례후보만 내는 정당을 새로 만드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이는 스스로 개정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서, 민주당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에 비례위성정당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민주세력의 선거연합정당으로 세탁하려 했습니다. 방법은 각 정당 비례후보들이 탈당해서 선거연합정당에 들어와 당선된 다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소속정당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거절했으나,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 참여해서 비례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로 출마할 후보들이 소속정당을 탈당해 선거연합

정당으로 총선에 나간 후,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민주당 위성정당과 차이가 있다면 지역구 후보도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핵심 지역구에서 진보정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 과정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연합정당의 핵심은 비례후보를 함께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연합정당이 진보정당 합당이라는 부담을 피해 총선에서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정당별 지지율 격차가 상당해, 선거연합정당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성사될지, 상승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최근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2016년 총선에서는 정의당 7.23%, 민중연합당(진보당의 전신) 0.61%, 노동당 0.38%, 녹색당 0.76%였고, 2020년 총선에서는 정의당 9.67%, 민중당(진보당의 전신) 1.05%, 노동당 0.12%, 녹색당 0.21%였습니다. 이런 득표율을 고려할 때, 진보정당들의 정당명부 득표를 한데 모으자는 극히 단순한 선거연합정당으로는 지지율을 대폭 높이고, 당선자 수를 크게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의 경우, 선거연합정당으로 선거에 나오려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고보조금도 포기해야 하므로 선뜻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할 만큼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보대통합을 통해 추구하는 바,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진보정당들이 힘을 모아 한국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명분이 갖춰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선거연합정당에 가장 적극적인 진보당이 노골적 친민주당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비판하긴커녕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과연 진보대통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전주를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고맙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걸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를 벌여, 그가 ‘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당의 강경한 친명계 의원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했다가 논란이 일자 탈퇴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역구 무공천에 대한 보답으로 친민주당 행보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강성희 의원이 “노동자 편에서 일할 후보, 낡은 기득권 정치판을 바꿀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음에도, 그의 친민주당 행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성희 의원이 선거연합정당의 향후 행보를 보여주는 예고편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의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진보당의 친민주당 행보도 제어하지 못하니, 진보 정당들의 호응도 저조합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오는 현실을 성찰하고, 기존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거연합정당이 친민주당 행보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면, 정의당으로서의 당의 지향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

노총 지도부가 민주당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진보정당 간 연합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은 진보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산해서 의석수를 늘린다는 정치공학적 이점도 분명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친민주당 행보를 보이는 진보당을 민주노총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다른 진보정당을 설득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3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은 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나요? 민주노총이 주도해 세운 민주노동당은 왜 없어졌나요? 민주노총이 최근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지다가 2007년 대선 후 다수파가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을 계기로 노무현 정신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가 주도한 부정경선은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이때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 후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로 단결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왜 하나로 단결하지 못했을까요?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통합진보당이 분열되고 없어졌기 때문 일까요? 아닙니다. 진보정당의 분열은 결과일 뿐입니다.

단결하지는 구호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20여 년이 지난 진보정당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패권주의로 점철된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 과정, 이념 없이 실리적인 목적에 따라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통합진보당이 2012년에 붕괴하는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진보정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비민주성과 패권주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

1996~97년 총과업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을 결성했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창당 후 4년 만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외적 성장과 달리,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위기가 고조됩니다. 첫 번째로,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2000년대 중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진보정당이 북핵,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먼저 비민주성, 패권주의 문제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예컨대, 위장전입, 당비대납과 같은 부정행위를 활용하곤 했는데, 2002년 2월 자주파가 대대적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변경한 용산지구당 사건이나, 2004년 광주 북구에서 당비를 대납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자주파는 1인 다표제의 맹점을 파고들어, 이른바 ‘세팅선거’를 통해서 당직, 공직을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후 행태를 보면, 예컨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자주파는 조직적 결정을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선거운동을 이끌고, 매우 저조한 선거결과를 두고 평가토론이 제기될 때도 책임을 회피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패권주의 문제는 문답 4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가 보인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은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992년 남과 북이 채택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진보진영뿐 아니라 각계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제출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고작 11줄짜리 성명이 다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거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10월 25일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평등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바꾸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자주파는 유감 표명마저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주파 수정안이 안건으로 확정되자 평등파 중앙위원이 퇴장하여 정족수 미달로 특별결의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회는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시 《한겨레21》의 기사, ‘진보는 관문점에서 멈춘다’(2006년 10월 31일)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끝내 반대한다는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한 민주노동당” “인권이든 핵문제든 북한에 대해선 늘 우물쭈물해왔던 이 땅의 진보에 묻는다”고 표제를 뽑았습니다.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북핵 인식이 대중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던 10월 24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일심회에 속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남한의 정치 동향과 민주노동당 내부 성원의 인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자주파의 편향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당에 대한 배신, 당규 위반 등 각종 쟁점이 섞여

있어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 내부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7년 대선 참패로 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자주파는 대선의 핵심 슬로건으로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밀었지만, 당내 다수는 정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핵심 슬로건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주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터 제작을 강행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 집니다. 대선 참패 후 구성된 비대위가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자주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열합니다.

◎ 자주파/평등파란?

민주노동당 내 정파 구도는 대체로 1980년대 사회성격논쟁에 뿌리를 둡니다. ‘자주파’는 ‘민족해방파’(NL) 계열을, ‘평등파’는 ‘민중민주파’(PD) 계열을 가리킵니다. 자주파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민족 모순’(분단)과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파악하며, 반미, 통일운동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평등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모순’에 주목하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평등파는 외세의 지배도 국내 권력을 통해 관철되므로, 군사독재-파시즘과 자본의 권력에 맞서는 투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이 분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2008년 2월 3일 전당대회 당시 모습입니다. 자주파는 대회장 안에 "비대위는 '최기영, 이정훈 당원 제명안' 철회하고, 당을 파괴하는 신당추진세력 징계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위). 제명안이 부결되자 대회장 밖에서는 "마지막까지 당원들을 속인 민주노동당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탈당 기자회견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아래). (사진출처: 매일노동뉴스(위), 통일뉴스(아래))

통합진보당의 파국: 당권파의 부정경선과 패권주의

그 후 진보정당은 잔류파가 남은 민주노동당과 탈당파가 세운 진보신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민주노총은 잔류파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사라졌을까요? 여기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10년 지자체 선거를 거친 후 새롭게 구성된 진보정당이 등장합니다. 민주노동당(잔류파),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창당한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둘째, 국민참여당이 함께 한 타인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당 대의기구에 민주노총 할당을 보장하던 제도도 폐지합니다. 민주노총 할당제는 진보정당에서 노동 중심성을 담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노무현 정신계승을 외치는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관계는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을 결성할 때, 민주노동당 분당의 주요 원인이었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서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부정경선을 폭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폭풍을 맞게 됩니다. 5월 2일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총체적 부정·부실선거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당권파는 그 결과를 거부합니다. 이에 더해 5월 12일 비례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표결에 부친 중앙위원회의 방안을 거부한 당권파 계열 당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를 진행하던 공동대표단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꾸려진 혁신대비위는 7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지만 이것이 부결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붕괴 수준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 방안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미 부정경선 문제가 불거진 5월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 민주노총은 8월 13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를 결정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지 철회 이유와 함께 배타적 지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2012년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의석 수를 늘리겠다는 실리적 목적만으로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 즉 당권파가 주도한 부정경선과 패권주의는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후 진보정당들은 각자 길을 걸어갑니다. 당권파만 남은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사건이 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되었다가 민중당을 거쳐 현재의 진보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세력들은 진보정의당을 거쳐 지금은 정의당으로 존재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2년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 후, 다시는 배타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을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으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을 단일화하려는 집행부의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대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관악을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진행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선거부정이 발생했습니다. 당대표의 선거부정 의혹은 총선 이후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문자내용에서 "다른 나이대로 답변해야 함"이라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여론조사기관 사무실에 통합진보당 측 대표로 참관한 대외협력위원장 이씨가 연령대 별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이정희 선거사무실에 전달하고, 이 전 대표의 보좌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연령 등을 허위로 응답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에게 대량 발송했던 것입니다. 대외 협력위원장 이씨는 201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진출처: 미디어오늘)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의장을 맡은 심상정 대표가 첫째 안건으로 '강령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을 처리하자 참관하던 당권파 쪽 당원과 중앙위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려 무대로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출처: 한겨레)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단지 분열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이 존재했을 때 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겠습니까. 철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조합원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당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정치세력이나, 그 밖에서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지켜보았던 정치세력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누구도 선뜻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무리하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다시금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동이 아닐까 숙고해야 합니다.

◎ 일심회 사건이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 손정목, 최기영에게 각각 징역 3년, 4년,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진보운동의 일탈이자 인권침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장민호를 통해 복측에 전달한 파일에는 핵심 당직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작성된 파일에는 중앙당직자 전체 명단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를 두고 “개인사상은 투철하지만 출세주의자”라거나 “추진력이 과도해 예의없다”라는 식의 적나라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당규에 따르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당(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기영 부총장의 행동은 당에 대한 배신이자 당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평등파는 진상규명과 당규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반면 자주파는당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일심회 사건에 당이 침묵함으로써 당을 아끼는 국민들마저 민주노동당을 불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전에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진보운동의 일탈행위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욱 최고위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기영 부총장이 “직접 나서 당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끝에 당 지도부는 12월 14일 평등파의 주장(진상규명과 처벌)이 주로 반영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언론브리핑에선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원 대중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외부로부터 어떤 음해나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한 자주파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진상조사와 당헌당규에 상응하는 처벌조치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7년 대선 후 참패 결과를 평가할 때 쟁점으로 되살아납니다.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에는 일심회와 관련해서 2006년 결정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됐기에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반면 자주파의 대표인사 중 한 사람이었던 김창현 씨는 일심회 관련자의 출당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자주파가 제명 안건을 폐기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재석 862명 중 553명 찬성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여러 대의원도 자리를 떠나면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당의 길로 갑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최근까지도 북한 조선노동당과 연계를 맺은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심회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지, 즉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사회운동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한 조직이 한국 사회단체 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날 때, 일심회 사건 때처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동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 “저 단체에선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북한 쪽에도 계속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한 조직이나 북한 당국의 목표는 그들의 대남정책을 한국 사회단체 내에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 사회운동의 자율성, 자주성에 위협을 가하고, 한국 사회운동을 북한 대남정책의 도구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북한연계조직이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역사를 볼 때,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패권주의란 무엇인가

과거 진보정당의 역사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패권주의’입니다. 도대체 패권주의가 무엇이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패권주의가 어떻게 나타났기에 이토록 회자되는 것일까요? 패권주의는 특정 세력이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자신들의 입장과 방침을 강요하면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여러 원리 중 하나이고, 소수의견 존중도 중요한 원리로 다뤄져야 합니다. 어떻게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결해나가느냐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다수파, 당권파는 민주주의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갈등을 폭발시켰고,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그들이 보인 패권주의는 먼저 승자독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의제는 비례성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 내 집단 간에 지지세가 6:4라면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자, 공직자의 구성도 대략 6:4의 비율로 나와야 비례성이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 선거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승자독식의 결과가 나오도록, 예컨대 9:1의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면 비례성의 원리가 파괴됩니다. 누군가는 ‘과잉’ 대표성을 누리고, 누군가는 ‘과소’ 대표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진보정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례성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정당이 과잉대표성을 누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른바 ‘정파세팅’ 선거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군가가 과잉대표성을 누린다는 사실 자체가 ‘소수파 존중’이라는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파괴합니다. 소수파의 대표성 자체를 크게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내 책임정치 원리의 부정

나아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는 권력의 교체, 순환을 거부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책임정치’라는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행부가

주도하여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 집행부가 서는 게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집행부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새 집행부는 자신의 정견을 실행할 기회를 얻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정치’ 원리가 작동할 때, 조직의 피가 돌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행부가 ‘실패를 인정하면 모두 잃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권력의 순환, 교체를 거부하면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둡니다. 사회양극화라는 시대 인식을 반영하여 새로운 진보정치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강했지만, 다수파인 자주파는 자신들의 노선과 방침을 민주노동당에 강요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며 시대착오적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대선의 슬로건으로 채택하려 했습니다. 당시 정세에서 이러한 슬로건이 적절한가에 대한 반문이 내부에서 강하게 있었고, 이에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공약집에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소략하게 반영하는 선에서 논쟁을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파인 김선동 사무총장이 당의 공식 결정을 어기고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대선 슬로건으로 담은 포스터를 찍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낳았고, 일상 시기도 아닌 선거 시기에 조직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대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가 출범하고 혁신안을 내놓지만, 자주파의 거부로 부결됩니다. 이는 자주파가 보인 패권주의적 정치

행태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분당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 부정경선 사태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당권파(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잔류해있던 자주파)는 당권과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 불법과 부정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러한 불법, 부정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권파는 진보정치가 끝장나는 것이 있더라도 정파의 이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셈입니다.

패권주의 청산은 진보정당운동의 시작

정리하면, 우리는 단순히 다수파가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패권주의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파가 되기 위해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로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려 하고, 권력의 교체와 순환을 의미하는 책임정치의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진보정당 운동의 생명력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를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진보정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나 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진보정당이 어떤 사회비전을 제시한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패권주의에 대한 반성은 진보정당의 새로운 걸음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연합정당 문제를 말할 때 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따져야 하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가 후보마다 입장이 제각각인 정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과거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는 기관지나 당원게시판에서 매우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쟁점이자, 합의를 도출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민주노동당이 겪었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경험은 이미 문답 3번에서 다뤘으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던 2006년과 비교할 때 북한 핵무기는 훨씬 더 고도화되었고, 이슈가 지닌 세계적 중요성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핵 문제로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만나는 정상회담도 이미 두 차례 열렸을 정도이니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

남한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북한의 핵정책과 전술핵무기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에도, 남한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계속 열렸고, 2007년에도 2·13 합의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6자회담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13 합의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돌연 북한이 핵 신고서의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를 거부하면서, 6자회담은 2008년 말 중단되었고, 영원히 다시 열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양자 간 회담마저 거부한 채,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거듭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향한 길로 달려 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두 차례 정상회담도 북한이 핵시설의 부분적 폐쇄(영변 핵시설 폐쇄) 외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결국 합의 무산(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적 지침을 발표하는데요, 기존 지침에 비해 매우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의 목적이 ‘국가주권, 영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라고 했는데요, 이는 타국의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나, 심지어 영토완정 즉 남북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

다. 또한 핵무기 사용의 조건에 관해 기존 지침은 ‘비핵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불사용한다’고 명시했으나, 새로운 지침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빠지고 ‘핵무기 공격 등이 임박한 경우’로 바꿨습니다.

종합하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남한도 경우에 따라 핵무기 공격대상이 되고, 심지어 핵무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위협이 담긴 셈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남한 전역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전술핵무기 체계의 개발과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정책이나 실제 개발 중인 핵무기는 공히 남한을 위협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정치세력이 북한 핵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진보대통합 정당이든, 선거연합정당이든 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입장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합의된 입장이 없다”거나 참여한 세력 각각에게 물어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후보는 “북한 핵무기를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후보는 “북한 핵무기는 자위 수단”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 탓”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장이 후보마다 제각각인 정당을 유권자가 어떻게 신뢰하고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반핵이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북한 핵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진보적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진보일 수 없다

사실 북한 문제는 단지 핵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분당,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2013년 ‘내란음모’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치며, 한국사회 진보진영의 일부가 여전히도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진보의 위기, 통합진보당 어디로?’라는 제목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어느 시민논객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를 대표하는 이상규 당선자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사태의 원인이 당권파의 종북주의가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에 대해 이상규 당선인의 입장을 말해달라.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다’라는 식의 말 돌리기가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때 이 당선자는 “종북이이란 말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군사독재시대의 색깔론이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다.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자는 이 당선자가 여전히 말을 돌리고 있다면서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 당선자는 끝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당권파’는 모두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3대 세습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말했고, 이석기 당선자도 “북을 있는 그대로 보자” “북한의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누구라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진보진영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속시원히 답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 유권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북한 민중의 시선으로 북한 정권을 보아야 한다

이석기 당선자가 ‘북한의 시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북한 누구의 시선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권력자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평범한 북한 시민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북한 시민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지닌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인권 억압에 노출된 북한 시민의 시선은 권력자의 시선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말한 시각이란 사실 북한 권력자의 시각이 아니냐는 반문을 곧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북한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어느 시민논객이 던진 질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바로 지금도 그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현존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진보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다른 의견을 지닌 정치세력이 존재한다면, 투명한 토론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선거연합정당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만 하는 논의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불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더라도, ‘전쟁 반대 핵무력 반대’라는 민주노총의 입장 정도면 합의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가 전 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현재의 NPT 체제보다 더 끔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일 것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도 공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올해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국제정세나 한반도정세가 토론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 미국만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 민주노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미국 추종정책에 따른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비판하고 있는데 침공 당사자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상식적 수준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그저 미국 추종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질문과 의견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법 채택을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서술하고는 있으나 반전평화운동의 의제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탄 밖에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에 한중일뿐만 아니라 북중러 공히 책임이 있다면 각 진영의 군사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비판해야 않나. 즉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한반도 핵무장을 강화하는 어떤 행동도 규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남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폭넓은 정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즉 한미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도 공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남한 핵무장을 반대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분명한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토론을 거치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핵무기 확산을 억제함은 물론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쟁반대 핵무력 반대 세계평화를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구를 사업계획안에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정안 문구는 강대국의 핵을 인정하면서 약소국 저항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북핵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전세계 비핵화와 결합되어야 한다.” 즉 전 세계의 동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표결 없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북핵 관련하여 이견이 존재한다. 이 자리에서 장시간 토론은 불가능하고, 수정동의안 발의자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칙적 수준에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무력 반대라는 문구를 최대한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자는 입장 모두 성립 가능토록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가 들어갔음에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붕괴가 진보의 대안일 수 없다

사실 현재의 쟁점은 ‘핵무력 반대’라는 원칙적인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입니다. 북한 핵보유를 용인하자는 관점은 핵무력 반대를 일반론으로 부정하지는 않되, 북한 비핵화는 전세계 비핵화와 동시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북한도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주장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이는 기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감축하고 그 외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계를 무너뜨리

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NPT가 기존 핵무기 보유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핵 독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비판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NPT 체제보다 훨씬 더 끈직한 세계적 핵무기 개발 도미노와 핵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라는 일반론이 진보정치 세력의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보유를 고집하는 한 북한은 '실패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없고, 부분적인 핵동결·핵감축 협상만 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상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노이 노딜을 통해서 분명히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이 전 세계적인 조약인 NPT 체제의 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인정된다면, 다른 국가는 왜 핵 보유를 시도하면 안 되는 문제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실패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운동 세력이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몰아넣을 핵무기 정책을 옹호한다면, 북한 인민이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고통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이란?

1970년 발효된 NPT는 세계에 핵무기 보유국이 우후죽순 늘어나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자 한 국제조약입니다. 당시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5개 국가, 즉,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대신, 핵무기 보유 5개국은 핵군축 교섭에 노력을 다할 것과, 핵발전 기술을 핵 비보유국들에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NPT에 따른 국제 핵 통제 체제를 흔히 'NPT 체제'라고 부릅니다. 현재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NPT를 가입했다 탈퇴(2003년)하여 핵무장에 나선 사례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처럼회’에 가입했던 사실도 있던데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혹시 민주노총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하는 건가요?

진보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를 보았을 때, 가설정당이 결국 야권 연대로 가기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법도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민주노총이 포퓰리즘 비리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실패한 야권연대 전략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새 전주를 위한 통큰양보!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를 벌여 ‘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당선 이후 친명계 강경파 의원모임인 ‘처럼회’에 가입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모든 게 민주당이 전주에 공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강성희 의원의 이런 파격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따라서 진보진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현수막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의 친민주당 행보가 이렇게 노골적이라서, 혹시 민주노총 집행부가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가교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설정당의 숨은 의도가 야권연대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지금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행적들을 돌아보며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민중당

진보정당들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외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태세를 돌변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일부 진보정당이 민주당이 급조한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민주노총 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 위성정당 참여를 공식화한 녹색당에 대해 실제로 지지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었죠. 민중당(진보당의 전신)은 민주당의 거부로 비례 위성정당 참여가 좌초된 터라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만일 그들이 원했던 대로 참가가 성사되었다면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서 탈락할 수도 있었던 거죠.

민주노동당(잔류파)와 통합진보당의 반MB 야권연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의 뿌리를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의 자주파,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 잔류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즉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연대를 추진합니다. 당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기로 향할수록 거듭된 정책실패로 지지를 폭락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로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처참하게 대패합니다. 연전연패 끝에 역사상 최악체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직후 촉발된 광우병 촛불집회를 계기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습니다. 민주당도 야권 단일화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2009년 4월 경기교육감선거에서 ‘범민주 후보단일화’로 김상곤 후보가 승리하면서 야권단일화, MB심판, 무상시리즈라는 선거승리 공식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전국적 반MB연대를 위해 민주노동당 후보가 과감하게 결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낸 후보들을 사퇴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2011년 4·27 재보궐 선거에서는 ‘재보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합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2012년 총선은 야권연대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4개 정당 중에서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탈당파)가

통합진보당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아니라 전국선거에서 최초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당 대 당’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당 대 당’ 선거연합으로 13개의 의석수(지역구 7석, 비례 6석)를 거머쥌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선 사건 이후, 야권연대에서 배제된 통진당 세력

그러나 야권연대의 최전성기에 진보정당은 곧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선거 부정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는 통진당 내 비례 의원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두고 중앙위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은 2012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합니다.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정희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박 후보를 떨어뜨려서 반드시 진보개혁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후보에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해 2013년 통합진보당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고,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 8대1의 해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당해산 이후 통진당 주도 세력은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잃었고, 그 후신 조직인 민중연합당, 민중당은 야권연대에 참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2013년 이후로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해 야권연대의 초점은 민주당-안철수 연대로 이동했고,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휘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보진영 가설정당은 야권연대로 가기 위한 가교인가

진보당의 과거 행적과 지금의 행보를 보았을 때, 결국 가설정당이 통합진보당 식의 야권연대를 다시 반복하려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충분히 제기될 법도 합니다.

게다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2016년, 2020년 총선 때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야권연대라는 틀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여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고, 당내 지도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야권연대라는 틀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강하려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주 보궐선거의 전후 과정이 예상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진보당만 이러한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재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존재감이 약한데, 그럴수록 진보진영 전반이 민주당과의 정치협상으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미망에 다시 뿔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지금까지 야권연대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만, 선거연합정당을 주도하는 진보정당의 입장에 따라 결국 ‘정권심판’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지지를 강행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 ‘어게인 2012년’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강성희 의원의 친민주당 행보를 명확히 비판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포퓰리즘 비리 정당으로 전략한 민주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실패한 야권연대 전략을 반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야 합니다.

08

노동운동의 어떤 세력은 ‘당 중심 노동운동’을 외치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정당에 대한 접근법과 노조에 대한 접근법은 구분을 두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념과 정책의 합의, 일관성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면, 노동조합은 정견, 종교, 성별, 인종 등등의 차이를 넘어 노동자 대중이 광범위한 단결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은 당에 대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노조를 입맛에 따라 분리시킴으로써 산별노조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원리를 보존해야 합니다.

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당 중심 노동운동’은 진보당이 채택한 노선입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의 정의가 무엇인지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힌 것이 없어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진보당 기관지 《너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당이 정치적으로 선도하고 공장의 당조직이 정치적 선봉대가 되어 노동조합의 투쟁을 아래로부터 안받침하고 정치투쟁으로 지향시키는 당 중심 정치투쟁”. 즉, 당이 미조직 노조 건설에 앞장서고, 노조 내 당조직이 정치적 선봉대가 되어 노조를 정치투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변혁적 노동운동의 조직적 주체가 진보정당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 진보정당은 “정권을 전취하는” 목표를 가지며 이를 위해 “노동자 대중에게 당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는 선전부대”이자 “노동자 정치간부를 육성하는 사람사업 공장”이라고 규정합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 전형단위의 실천적 표현은 ① 조합원 50% 입당, ② 의결단위를 통한 배타적 지지 확보, ③ 현장 당분회와 현장위원회 전면적으로 건설”이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진보당의 당중심 노동운동은 2024년 총선에서 원내 정당화, 즉 국회의원 당선자 배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 중심 노동운동은 언뜻 보면 좋은 의미 같습니다. “노동계급의 정권 전취 투쟁”을 실현하기 위해 “1만 당분회와 10만 활동 당원을 조직한다”는 계획은 노조가 공장 울타리를 넘어 정치투쟁에 나선 수 있는 묘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조 안에 당조직을 세우면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당조직과 무관한 조합원들은 어떤 정치투쟁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 중심 노동운동은 오히려 노조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정파노조의 폐해

노동조합은 성별, 인종, 소득, 정견 등 노동자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넘어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조직입니다. 자본주의를 변혁하기 위해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포괄해야 하는 정치적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개별 기업노조를 넘어 산별노조로, 또 산별노조를 넘어 총연맹으로 단결해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조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토론과 설득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운영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다양한 차이를 넘어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조 내 건강한 정파 활동은 필요할 수 있지만, 특정 정파가 노조활동을 독점하는 정파노조는 해악을 낳습니다. 민주노총 내 다양한 정파들도 특정 정치적 견해를 다수 조합원에게 강요하는 일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진보당의 '당 중심 노동운동'은 정파 활동의 차원을 넘어 노조 안에 당의 하부조직을 건설하는 정파노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정치 활동을 조직한다는 명분으로 노조의 운영과 당원 가입과 당분회 활동을 연계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진보당은 노조가 필요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신규

노조 가입과 동시에 당원가입서를 쓰도록 강요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노조 활동의 요건으로 삼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면, 이는 민주노조의 제1원칙인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또 최근 진보당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노조 재정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지만, 노조와 정당의 이런 부적절한 유착관계 논란만으로도 노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커져 단결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특정 정당에 종속되는 정파노조가 되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은 파괴됩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노조 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치 견해를 달리하는 조합원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될 위험이 많아집니다. 나아가 정파노조가 더 극단화된다면 정당의 정책과 방침에 대한 노조의 비판도 금기가 됩니다. 노조는 당의 노선을 실현하는 전달벨트일 뿐이기 때문에 노조와 정당 간의 상호작용은 없고 일방통행만 허용됩니다. 정파노조는 공장 울타리를 넘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노조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폐해를 낳을 것입니다. 진보당의 ‘당 중심 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해치고, 노조의 정치투쟁을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계급적 단결과 양립 불가능

노동조합은 정당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적 역할이

있습니다. 노조의 임금 투쟁과 단체협약은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입니다. 산별노조로의 단결과 연대는 경제변화와 산업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방어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노동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산별노조는 이 힘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자본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조가 광범위한 단결을 이루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당 중심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정파노조는 이러한 산별노조의 정신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노선에 동의하는 일부 노조를 따로 묶어내는 방식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토전쟁에서 자신의 영지를 확대해나가는 것과 같이, 민주노총의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질서에서 정파노조의 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조직경쟁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업종을 넘어 노동자 대단결을 이루려는 산별노조를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 특정 정파노조를 동원하는 것이 당장의 정치활동에서 더 쉬울 수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방식이 아닙니다. 당과 달리 노동조합은 광범위한 대단결에 기반을 둔 정치적·사회적 운동을 합니다.

정당으로부터 자율적인 노조의 지지·협력

과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노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조는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정당이 서로 지지, 협력하는 관계와 조합원의 당 가입을 요건으로 노동조합을 특정 정당에 종속시키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창립 직후 다음과 같이 민주노동당과의 조직적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조직체이면서도 상대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200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즉,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은 정당과 별개로 노조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세의 필요에 따라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당이 정세적으로 어떤 노선을 지향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며 변화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특정 시기, 특정 정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는 노동운동 내부에서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합의를 만들어갈 문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해서라도 진보정당이 국회의원 몇 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보정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권연대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겠다는 건, 양극화된 표심을 지렛대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민주당을 극복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에 기반해,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없거나 양보한 빈자리에서 민주당과의 협력을 전제로 원내에 진출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명 연장 방식은 진보정치를 담보상태로 빠뜨리고,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진보정당은 곧 딜레마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 국면에서는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정치양극화 시대일수록, 지지자들을 확대하는 전략이 아니라 반보수-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진보 정치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연대, 위기의 진보정당

2020년 총선에서 진보정치는 완패했습니다. 진보정치가 도약할 계기가 되리라 여겨졌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위성정당 난립으로 애초 취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진보정치 세력은 자신들이야말로 ‘촛불혁명의 적자’라고 자임하면서, ‘정의로운 생태 복지 국가’(정의당), ‘차별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사회’(진보당)를 내 걸었으나, 결과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는 더 저조했습니다. ‘주4일제 복지국가’(정의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진보당)을 내세우며 복지국가의 지속과 촛불혁명의 완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을 등진 대중의 표심을 흡수하기는커녕,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과 함께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진보정치가 아니라 ‘탄핵의 강을 건너 탈 박근혜에 성공’한 보수,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심판받는데 왜 진보정치도 외면당했을까요? 시민들이 진보정치를 민주당과 구별되는, 질적으로 다른 대안적인 정치세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반 MB 야권연대를 구실로 민주당과 당 대 당 선거연합을 한 바 있고, 대선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중도 사퇴하며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2019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구실로,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고 공수처법 도입에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민주당 2중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 차별성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데다, 걸핏하면 지역구 나뉘먹기식 선거연합을 하고, 심지어는 ‘내로남불’ 민주당, 86세대 정치인 비리로 정국이 소용돌이칠 때조차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진보정당을, 시민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아류 정당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심판 국면에서 진보정당이 함께 외면받는 건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보정치 세력 중 일부는 야권연대에 미련을 못 버린 듯 보입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몇몇 지역구에서 양보를 받거나, 민주당과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방식 말입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고맙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구호와 함께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한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는데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양극화 시대, 반보수연합이 진보정치의 무덤인 이유

독자적인 정치활동, 대안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몇 석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은 야권연대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국민의힘은 더 싫다는 양극화된 표심에 기대어, 민주당이 양보한 지역구에서 승리하여 원내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이 이런 식으로 생명연장을 꾀한다면 진보정치를 담보상태로 빠뜨리고, 몰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양극화된 표심, 정치양극화 상황은 진보정치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니면 결국 적의 편'이라는 단순 논리 앞에, 진보 정치가 결국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정치양극화는 진보정치에겐 무덤입니다. 이 전략에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보수 선거연합 아래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으면 진보정당도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는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구별 짓기, 독자생존을 시도하면, 국민의힘 편이나는 비난과 함께 야권연대 기회마저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주저하게 됩니다.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하위파트너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보 정치의 재건은 민주당 비판으로부터

진보정치 세력은 민주당의 선동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들먹이는 노동자와 민중은, 정치의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으로서 민중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 ‘불만을 가진 집단’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도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조 개정에 관심을 가진 건,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원청 사용자성을 보장해주려고 의도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은 자신을 겨눌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지, 노조법 2조와 같이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보정치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진보정치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한 보루로서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 주요 인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규범을 위협하고 후퇴시킬 때, 일관되고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영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진보정치 재건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합이 아니라 민주당을 대체하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에 위협적인가

야권연대를 통해 의석수를 늘려보겠다는 일부 진보정치 세력의 전략은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를 얼마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지에 애써 눈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눈감는다면, 또다시 진보정치는 민주당과 함께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보정치 세력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앞장서 이를 비판해야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브렛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위협 신호를 연구해서 독재자를 감별하는 테스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네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들의 지난 행보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꼽아보았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발간한 소책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협한 이유」(2021. 11. 4.)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민주당 내의 배신자라는 뜻을 지닌 ‘수박’은 주로 이재명 지지자(개딸)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정치인을 지칭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직접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

다. ‘개딸’들은 2023년 6월, 이낙연 전 대표의 독일 강연에서 깨진 수박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난입했고, 올해 3월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수박 깨기 행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제20대 대선 투표를 목전에 둔 작년 2월 말,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언론을 비판하자 지지자들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발로 차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손에 쥐고 있던 풍선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유감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후보 차원의 대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선 패배 직후 이재명 후보는 ‘개딸’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3.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협박)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언론사들에 “이런 것이 징벌 대상이다. 손을 떼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 이 후보만이 유일하게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의 신청건수는 총 40건인데 이 수치는 17대부터 20대 대선의 후보자들이 이의신청한 건수 총 55건의 73%에 달합니다. 즉, 이 후보가 이의신청을 남발하여

언론사를 압박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4.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민주당은 꿈수 탈당이나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활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등 법안을 직회부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3:3 동수로 구성하고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보장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취지로 생긴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규범을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발전하려면 민주노총이 뭔가 변화를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오늘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는 민주노총의 계급적 대표성이 위기에 빠지고, 정치적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격차 축소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회세력화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점점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 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계급대표성의 위기, 진보정치의 위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보 정치의 위기를 정당운동의 차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정치의 위기란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쇠퇴하고 있다는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던 2004년은 민주노총 내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거세진 데다,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 방침을 두고 좌충우돌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후자가 문제였는데 민주노총이 정부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교섭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싸고 일대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 여당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민주노동당 내에서의 논쟁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2005년 임시대의원회에서 시너와 소화기가 등장하는 폭력 사태로 비화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해는 노조 비리 사건이 폭발하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차의 채용 비리 사건이 3~4개월 간격으로 터진 데다, 11월에는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도부가 불명에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에 따른 계급 대표성 위기에다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민주노동당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고, 이는 곧바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하락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에 사회연대전략을 제안하지만,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것이 ‘고통 분담론’, ‘정규직 양보론’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진보정당이 민주노총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선거 경험과 노동 정치의 위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만 야권연대를 도모한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역시 ‘반MB 야권연대’를 승인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이들 진보정당 후보와 단일화한 ‘반MB 단일 후보’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시기의 야권연

합에 적극 동참하고, 민주당에 대한 투표도 가능하게 열어둔 것입니다.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경험은 민주노총에는 진보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후과가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 역시 진보 정치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노동 의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고, 정치적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점차 주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을지로 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21세기 초 진보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한 대중적 기반마저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정당, 사회운동, 노동조합의 이슈, 정책을 주도하는 '적용 전략'에 성공하였고, 이를 당리당략에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노동 의제 대부분을 민주노총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목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의제일수록 민주당의 주도력은 두드러졌고, 민주당의 정치전략을 양해하지 않고는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노동 의제를 드러낼 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에 기댄 제도개선 투쟁과 진보정당과 함께 하는 제도개선 투쟁은 목표와 성격을 분명히 달리합니다. 전자는 현안 해결에 유리할지 모르지만, 중국에는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 종속되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후견인, 그리고 계급적 이익보다는 조합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략하고 말 것입니다.

후자는 단기적 목표 달성에는 다소 불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



2012년 4월 8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식을 한 직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명숙 민주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 후보 집중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이용선 후보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며 “진정한 노동자 시민의 대표 이용선 후보를 국회로 보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이 잘살도록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야권이 단결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함께 민주진보정권을 마련해 서민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진출처: 참세상)

운동의 문제 해결 능력을 축적하고 나아가 진보정치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야기 하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민주당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민주노총 혁신에서 출발해야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노동자 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보수주

의 또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분별정립하여,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운동전략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계급적 단결과 함께 민주노총 스스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즉 사회세력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세력화를 위해서는, 첫째, 진보진영이 민주당의 외곽부대에 불과하다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역시 진보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야권연대에 대한 미망을 버리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비판해야 합니다. 야권연대는 그 자체로 진보 정치의 토대를 잠식하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노동자의 요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왜곡하고 소비할 따름입니다.

둘째, 국제정세와 한반도정세를 시야에 두고 위기의 세계질서를 조망하며 한국 사회운동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세계질서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인데도, 우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동운동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격차 축소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침체 국면에서 사업장 단위의 임금 극대화 전략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확대할 뿐입니다.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연대임금·연대고용을 통해 격차를 축소하는 운동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표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노동 중심성이라는 말이 조합원의 (혹은 기업별 노조의) 실리주의적 이해를 정당화하거나 노조 상층 인사의 원내 진입을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선 안 됩니다.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 과학적 분석과 현실 적합성을 가지고 계급적 단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노동, 격차를 해소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미로서 노동,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 노동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언이지만, 사회운동 전체의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제언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모두가 곤란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혁신, 당의 혁신이 접점을 찾게 되면 그 속에서 진보정치를 재건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 너머 대안세계로

깊어지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하고, 연대임금·연대고용을 매개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적 차이에 기반을 둔 여성의 권리 실현과 한반도·동아시아의 비핵평화를 지향합니다.

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혁신하자

IMF위기 직후인 1998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대안적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창립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동의 사상과 이념을 혁신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발간

3, 6, 9, 12월에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정책 및 교육 자료를 실습니다.

웹진 《사회운동포커스》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정세, 운동 전략, 국제 이슈, 투쟁현장 소식을 전달합니다.

▶ QR 코드 스캔으로 텔레그램 채널 구독!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텔레그램 | t.me/socialmovementfocus



사회운동 혁신을 위한 한걸음,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https://www.pssp.org/support/>

▶ QR 코드 스캔으로
사회진보연대 후원!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원은?

우편으로 《계간 사회진보연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세와 운동의 방향에 관한 교육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독서, 영화, 등산 등의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 팩스 02-778-4006
주소 [0398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메일 pssp4001@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pssp.org>
페이스북·유튜브 '사회진보연대'를 검색하세요
후원계좌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예금주: 사회진보연대)